

문희상 국회의장, 검찰 개혁 12월3일 부의 결정

민주·한국 “원칙 위배”…바른미래 ‘환영’

여야 3당 ‘각양각색’ 입장 엇갈려

여야 원내지도부는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토론에 부침) 시점을 오는 12월 3일로 결정할 것에 대해 각양각색 엇갈린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기 주장하는 ‘법리’와 ‘원칙’에 어긋난다며 유감 또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합리적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 입장에서 여야 간 더 협의를 하라

는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으신 거겠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국민의 명령을 유예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검찰개혁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이 아니면 왜 법사위로 보냈느냐”며 “그런 면에서는 매우 유감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줘야 한다는 것인데 (한국당의) 해석과 상이한

부분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내년 1월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법 해석”이라며 “만약 당초에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면 당겨질 수 있겠지만, 법사위 법안이 아니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안이라 심사 기간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문 의장에게 더이상 정쟁이 지속되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해달라 했는데 그렇게 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남은 기간동안 패스트트랙 3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바른미래당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사법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 시점에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법사위에 법안 이관 이후) 90일이 경과한 12월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넘겨받은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최후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들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이를 놓고 각 당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사법특위는 지난 8월31일 활동기한이 종료됐다. 이를 기점으로 체계·자문 절차는 생략하고 남은 상임위 법안심사 기한만 적용(민주당 주장 하면 ‘10월 29일’, 법안심사 기한이 아닌 체계·자문 기한만 적용(문희상 의장 결정 하면 ‘12월 3일’, 사법특위 활동기간 124일을 제외한 56일에 체계·자구 심사기한 90일을 더할 경우(한국당 주장) ‘1월 23일’까지 심사를 마치면 된다.

한편 문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면 12월3일 이전에 부의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신속히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오늘 기자간담회
‘민주당 쇠퇴론’ 입장 밝힐듯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당대표로서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당초 내달 5일 기자간담회를 열 계획이었다가 이날로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당내 초선인 이철희·표창원 의원은 최근 이 대표를 만나 ‘조국 사태’로 인한 20·30대 지지층 이탈을 우려하며 당의 쇠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조국 사태’와 관련해 유감의 뜻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정철·김경수·이재명 회동 어깨동무하며 ‘총선 원팀’ 결의

친문·비문 지지자 통합



양정철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28일 저녁 경기 수원시 모처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날(28일) 만찬 회동을 갖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29일 양 원장 측에 따르면 양 원장과 김 지사, 이 지사는 전날 오후 경기도 수원 모처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이번 만찬 회동은 김 지사의 서울 방문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 지사는 전날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이날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경남 지역 의원들과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에 양 원장이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으로 김 지사를 초대, 이 지사와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세 사람은 만찬 회동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친문’(親文)과 ‘비문’(非文) 지지자들 간의 통합과 단결을 위해 애쓰자고 의견을 모았다. 정치권에서 김 지사는 친문의 핵심으로, 이 지사는 비문을 대표하는 인사로 분류된

다.

아울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두 사람에 대한 위로의 말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양 원장 측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내 다른 갈등 요소는 없는데, SNS나 지지자들 사이의 유일한 (갈등의) 잠복요소가 이른바 친문·비문 지지자들의 갈등”이라며 “지지자들 간의 통합과 단결을 위해 세 사람이 애쓰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 원장은 앞서 지난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원의 정책약식에서, 김 지사와 이 지사를 따로 만난 바 있다.

유승민 “변혁 15인과 만나 창당추진위 매듭”…곧 창당 절차

“선거법, 추악한 뒷거래…변혁, 의원정수 확대 반대”



유승민 변혁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국회의원·지역위원장(원외)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조만간 신당 창당 추진위원회 구성에 돌입할 전망이다.

유승민 변혁 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외 지역위원장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의 위원장 대다수가 신당에 대해 ‘창당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창당 로드맵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며 “(‘변혁’) 15인 국회의원을 모신 다음 신당 창당추진위를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했다.

유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 정수 확대는 추악한 뒷거래”라며 “변혁이 의원 수는 적지만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심지어 바른미래당 일부까지 아합하고 뒷거래하는 문제에 대해 막아달라”고 말했다.

앞서 변혁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 주장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 선거법 개정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략적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합의성 문제를 두고 여야 3당이 어렵게 협상을 이어가는 등 하루하루 삼일음판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정략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아무런 명분 없는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을 들고 나와 정국을 어지럽힌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보다 국회의원 수를 30명 늘린다고 해서 정치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국민이 반대하는 의원 정수 확대를 들고 나온 것은 패스트트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지금 해야 할 일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문병호 “유승민 당 장악하면
한국당行 주장, 손학규 레토릭”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문병호 전 최고위원은 29일 유승민 의원이 당을 장악하면 당이 자유한국당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손학규 대표의 주장에 대해 “자신의 대표직을 지키기 위한 레토릭”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에 출연해 “유 전 대표가 당을 어떻게 장악하고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당을 한국당에 넘길 수 있는냐.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당에는 호남 세력도, 손 대표 세력도, 안철수 전 대표 세력도 유 전 대표 세력도 있다”며 “어느 한 세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당이다. 손 대표의 (주장은) 당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명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손 대표에게 대표직을 내려놓고 비상대책위원회 혹은 공동대표제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힌 뒤 “손 대표 자신만이 한국당과 통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과신”이라고 했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